

2022년 예산안

확장적 재정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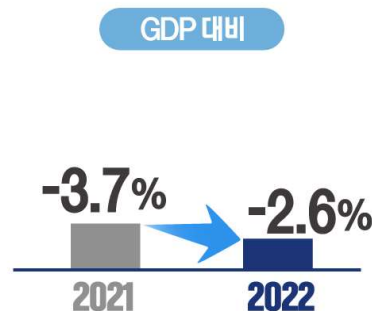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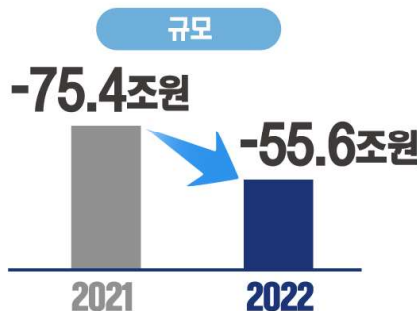
총지출 2021년 558.0조원

46.4조원
+8.3%

2022년
604.4조원

재정건전성 기반 확보

통합재정수지



01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 일자리 조기 회복 지원
-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
-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Full 산업 혁신 및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 SOC 고도화·첨단화

02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 소득·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
-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
-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
-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제고
- 소상공인 단계별 재도약 지원
-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4대 투자중점

03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
-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면 전환
-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04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가족 행복·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재정혁신

재정지출 재구조화

+

협업예산 고도화

+

국민공감 예산

'22년 예산안 12대 중점 프로젝트 (250조원 수준, 중복포함)

경제회복·양극화 대응



신양극화 대응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83.4조원
 * 소득(16.9조원) + 고용(1.9조원)
 + 생활(41.3조원) + 취약계층(23.3조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23.5조원
 * 일자리(5.5조원) + 자산형성(1.9조원)
 + 주거(6.3조원) + 교육·복지·문화(9.7조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활력회복 4.5조원
 * 안전망(1.9조원) + 금융(1.4조원)
 + 구조전환(0.6조원) + 지역상권(0.6조원)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 3.4조원
 * 교통망 확충(1.7조원) + 첨단화(1.5조원)
 + 스마트 시티(0.2조원)

뉴딜 등 미래대비 투자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 33.7조원
 * 디지털 뉴딜(9.3조원) + 그린 뉴딜(13.3조원)
 + 휴먼 뉴딜(11.1조원)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6.2조원
 * 뉴딜(3.6조원) + 미래주력산업(2.8조원)
 + 프론티어형 전략기술(0.7조원)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2.0조원
 * AI·SW 등 핵심분야 + 실전인재 교육
 + 직업훈련



탄소중립경제 선도 11.9조원
 * 경제구조 저탄소화(8.3조원) + 저탄소 생태계(0.8조원)
 + 공정한 전환(0.5조원) + 제도적 기반(2.3조원)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52.6조원
 * 재정분권·재정보강 등(24.7조원) + 균형발전 인프라(12.1조원)
 + 지역균형뉴딜(13.1조원) + 지방소멸대응(2.7조원)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 21.8조원
 * (자연재해 5.3조원) 풍수해 + 산림재해 + 지진
 (생명보호 14.1조원) 자살 + 교통사고 + 산업재해·화재
 (생활환경 2.4조원) 수질 + 대기 + 자원순환



가족 행복·육아 친화 5+3 지원 6.6조원
 * 친(親)가족 5대 패키지(4.1조원) + 아동수당(2.4조원)
 + 모자건강관리 + 일·가정 균형



장병 사기진작 토탈 패키지 4.7조원
 * 봉급 + 급식 + 자기개발 + 사회복지준비금 + 주거여건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내용

영유아·아동

- 임신바우처 확대
(60→100만원, 건강보험)
-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신규)
- 첫만남 이용권
(출생시 200만원, 신규)
- 아동수당 확대
(7세 미만→8세 미만, +43만명)
- 입양아동 위탁보호비
(월 100만원, 신규)

청년

-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장병750+정부250=1000만원, 신규)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20만원, 12개월)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360+정부1,080(최대)=1,440만원)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5~8구간 67.5~368→350~39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4만명, 신규)

중장년

- 사업재편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전직지원
 - 중장기 유급휴가훈련(1만명)
 - 산업구조 특화훈련(2.5만명)
 - 새출발 크레딧(0.5만명)
 - 노동전환지원금(0.2만명)
-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
새일센터 인턴(0.8만명)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263만명, 신규)

어르신

- 기초연금 지원 확대
(598→628만명)
- 노인일자리 확대
(80→84.5만개)
- 디지털 돌봄 확대
(8.4→12.7만명)
-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확대
(20→30만명)
- 실버마이크
 - 어르신 예술 창작·공연활동 지원
(100팀, 최대750만원, 신규)



수혜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 저소득층

- 기초생보 보장성강화
(15.0→16.4조원)
- 기준중위소득 5.02% 인생(4인가구)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긴급복지 요건완화
- 일반재산 1.88→2.41억원(대도시)
- 금융재산 500→600만원
- 초·중·고생
학습특별바우처 지급
(年 10만원, 신규)
-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2만명, 신규)



○ 소상공인

- 손실보상 추가 지원
(1.8조원)
- 저신용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공급 (1.4조원)
- 원스톱 폐업지원
패키지 지원 (1만명)
- 오디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최대 1억원 지원 (신규)
-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진출 지원 확대
(5.3→6만명)



○ 농·어·민

-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
(65→60세 이상)
- 농어업 재해피해
복구 지원 확대
(0.8→1.1조원)
- 영농정착지원금
(1,800→2,000명) 등
청년유입 지원 확대
- 농어촌 활력증진패키지
(255→345개소)



○ 장애인

- 장애인 돌봄부담 완화
(2.4→2.7조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월 100→120시간) 등
- 직접일자리 확대
(2.5→2.7만개)
-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 (2,030→3,264대)
- 장애예술공연장 신규 개관
'22년 4월



○ 한부모·다문화가정

- 한부모가족 근로소득공제
30% 도입 (1.4만명, 신규)
- 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
(월 10→20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0.1만명, 신규)
-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프로그램 (20만명, 신규)
- 취학전-후 방문학업지도
- 전연령 심리상담
- 초·중·고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19억원, 신규)



한국판 뉴딜 2.0 33.7조원

진화하는 뉴딜 : 디지털·그린 대전환 가속화 + 사람 중심 휴먼 뉴딜

구 분	'20추경~'21 기투자 (국비)	'22년안 (국비)	'20추경~'25계획 (국비)	'20추경~'25계획 (국비+지방비+민간)
합 계	32.5조원	33.7조원	160조원 수준	220조원 수준
1. 디지털뉴딜	10.8	9.3	49조원 수준	67조원 수준
2. 그린뉴딜	10.3	13.3	61조원 수준	97조원 수준
3. 휴먼뉴딜	11.4	11.1	50조원 수준	56조원 수준

디지털 뉴딜 9.3조원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설

- D.N.A 생태계 강화 산업별 5G·AI 융합 가속화 등 6.2조원
-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0.5조원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0.8조원
- SOC 디지털화 도로·철도·항만 등 디지털 관리기반 마련 1.8조원

그린 뉴딜 13.3조원

탄소중립을 위한 확대개편, 기후대응기금 신설

- 탄소중립 기반 구축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지원 등 1.1조원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도시 조성 등 3.5조원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 등 6.8조원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녹색 금융 도입 등 1.9조원

휴먼 뉴딜

11.1조원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청년정책' 및 '격차해소' 신설

- 청년정책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2.2조원
- 격차해소 교육격차 및 한부모·노인·장애인 등 돌봄격차 해소 1.3조원
- 사람투자 AI·SW 첨단분야 인력양성,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 등 2.0조원
- 안전망 상병수당 시범사업, 산업구조변화 대응 노동전환 지원 등 5.6조원

청년대책 23.5조원

◎ 일자리 대책 5.5조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14만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개편·재추진 2.6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확대 (10 → 17만명)
- 신산업 직업훈련 지원
 - K-Digital Training (1.7 → 2.9만명)
 - K-Digital Credit (4 → 7만명)
-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1,600 → 2,100억원)

◎ 자산형성 지원 1.9조원

- 소득 구간별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
 - 청년내일 저축계좌
 - 청년희망적금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지원 7만명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연장
-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신설 (장병750+정부250=1000만원)

◎ 주거지원 6.3조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20만원, 12개월)
-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월 20만원)
-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연장
- 청년층 중심 공공자가주택 시범 공급

◎ 교육·복지·문화 기본권 보장 9.7조원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5~8구간 67.5~368 → 350~390만원)
- 청년 심리건강 보호 지원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설
 - 청년층 대상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확대
- 저소득청년 문화활동비 지원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2050 탄소중립 12조원

경제구조 저탄소화

8.3조원

-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 및 보급 확대
- 탄소배출 산업 공정 대체 기술개발 지원
- 친환경차 50만대 보급 달성
- 생활밀착형 숲, 미세먼지 차단숲 등 도시숲 대폭 확대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조성

0.8조원

-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바이오 등 녹색 유망산업 기반 확보
- 100개 중소 유망기업의 R&D·사업화·해외진출 지원
-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재활용 클러스터 본격 조성

계층·산업·지역의 공정한 전환

0.5조원

- 내연차·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뒷받침
- 사업전환·재편 기업을 위한 융자·펀드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 탄소중립 생활실천 인센티브 도입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2.3조원

- 탄소저감 설비 자금조달 등을 위한 7.6조원 규모 녹색금융 공급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S) 등 탄소배출량 감축 기술 맞춤형 투자
-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新국제질서 대비 탄소영향산정방법 개발

기후대응기금 신설

2.5조원

기후위기 적극 대응과 脫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목적 기금 신설

수입	지출
탄소배출권 매각수입	온실가스 감축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타 회계·기금 전입	취약산업·고용·지역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역균형발전 52.6조원

재정분권·재정보강 24.7조원

- 지방소멸대응특별양여금 신설
10년간 年1조원('22: 0.75조원)
- 지방소비세 순증 1조원 수준
- 지방교부세 +11.6조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1조원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12.1조원

-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추진
 - 18개 SOC사업 가속화 0.8조원
 - 5개 특화·전략산업 육성 0.4조원
- 생활SOC 확충
 -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구축 5.9조원
 - 국민여가활력기반 구축 4.1조원
 -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조성 0.8조원
- 메가시티 기반 조성을 위한
비수도권 광역철도·도로 확충

지역균형뉴딜 가속화 13.1조원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산,세종) 구축
- 5대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
- 지역 생태·관광자원 복원
-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 지원

지방소멸대응 2.7조원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정착 촉진
 - 일자리, 교육, 생활인프라 등 확충 지원
- 지역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2.0 추진
- 국립예술단체 순회공연 확대
- 지자체-대학-기업 협업
혁신인재양성사업(RIS) 확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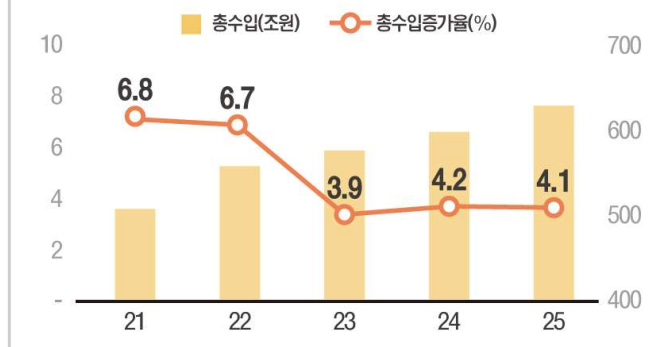
기본 방향

- 포용적 경제회복, 경제사회 구조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재정의 역할 지속**
- 선제적 총량관리·재정혁신을 통해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재정여건 및 총량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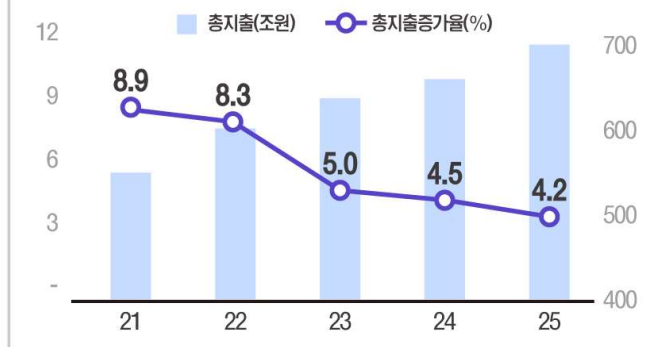
총수입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 **세수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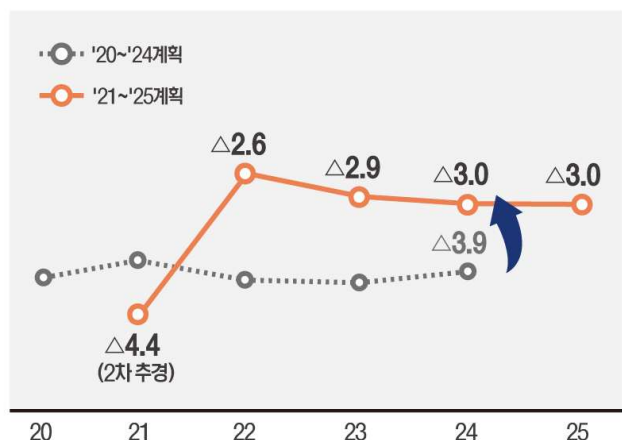
총지출

2022년 확장기조 유지 +
경제회복 추이에 맞추어 증가속도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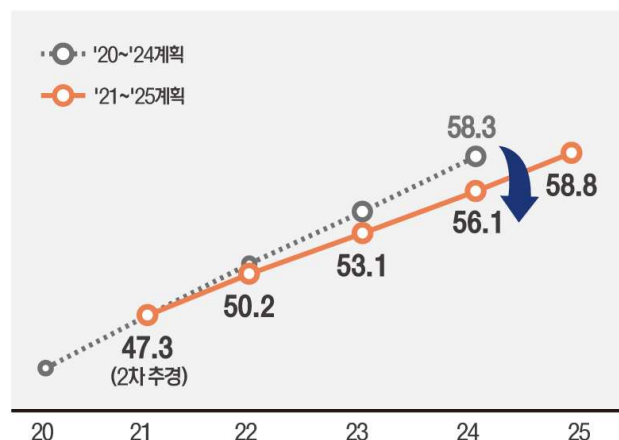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전망

2025년 $\Delta 3.0\%$ 수준 관리



국가채무비율 전망

2025년 50% 후반 수준 관리



미래대비 재정여력 비축 및 2025년 재정준칙 준수